

광주시, 내년 저출생 대응 2천818억 쓴다

생애주기별 47개 사업... '임신·출산·돌봄' 대폭 확대 출생 축하 상생카드 50만원 지원 등 가정돌봄 강화

광주시가 내년 저출생 대응에 2천818억 원을 투입, 임신·출산·돌봄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광주시는 19일 “내년도 예산 2천818억 원을 투입해 의료·돌봄·일생활 케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 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 분야인 의료·돌봄·일생활 케어에 강화한다.

가정돌봄의 경우 2025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 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는 사업비를 2배로 증액(2억원→4억원)하고 대상자도 1천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 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 인력에 최대 200만원(3개월·6개월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교 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

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도 신설·확대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적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보전 비용(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이 신설된다.

임신 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 생애 1회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를 부모 생애 1회에서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특히 공무원의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 기간 남성공무원 2일 임신 검진 동행 휴가 ▲8세 이하 자녀 공무원 연 5일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자녀 공무원 24개월 범위 내 1일 1시간 아이키움시간 부여다.

강기정 시장은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한파 대비 온기텐트 설치·점검 19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직원들이 관내 임동 기아챔피언스필드 앞 버스승강장에서 겨울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기텐트(바람 가림막)을 설치·점검하고 있다. 북구는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35개소에 온기텐트를 설치해 운영한다. /김애리 기자

“농업민생 4법” 즉각 시행” 촉구

김영록 지사 “거부해선 안될 민생법안”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농업민생 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입장을 내 “농업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농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돼야 하며 재해는 농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재해 할증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 행사는 농민 생존권과 농업 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고 농업인 정부가 찬성하고 고대한 민생농업 4개 법안은 오직 국민 만을 보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한덕수 총리가 거부할 수도, 거부해도 안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농업민생 4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2관왕

‘세외수입’ 국무총리상·‘예산절감’ 행안부장관상 동시 수상

광주시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 수상했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확충과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동시 수상 특전으로 2억5천만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광주에 등록된 98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취득세 및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 분야에서 예산담당관실 사례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재정혁신단을 신설하고 4대 분야 16개 과제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받았다. /변은진 기자

전통시장 찾은 김지사 “민생안정 총력”

목포 동부시장서 지역상품권·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설명

김영록 전남지사가 탄핵정국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19일 전통시장을 찾아 어려운 지역 경제와 민심을 살피고 지역사랑상품권·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민생안정 대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방문객 등의 어려움을 경회한 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명석 동부시장 상인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더욱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도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실질적 지원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원 발행 및 할인율 최대 10%까지 확대 ▲영세 음식

점 2만개소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배달비 지원 공짜배달로 소비 증진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이차보전 추가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민생회복 관련 예산을 신속 집행해 도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시장을 찾은 도민들에게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연말 송년모임 적극 동참 등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탄핵 정국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이 없도

록 전남도가 앞장서 흔들림 없이 경제와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는 19일 “비상계엄 사태와 대령 탄핵 정국에 따른 민생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20일부터 월 2회에서 월 4회(매주 금요일)로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를 통해 1천700여명(본청 1천500명·동부지역본부 200명)의 직원이 인근 식당가를 이용,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쓰레기소각장 깜깜이 행정”

서창동 쓰레기소각장 반대위, 시청 앞 2차 주민대회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입지 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 주민들이 ‘깜깜이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서구 서창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시청 앞에서 주민 100명이 모인 가운데 2차 주민 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광주시는 예비 후보지를 광산구 3곳, 서구 1곳 등 총 4곳으로 좁히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며 “서

창동은 도심이나 학교와 가까워 적절 한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광주시는 후보지 위치 등 정확한 입지 예정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유치 신청 주체나 토지 소유자 등도 공개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민 의견이나 동의 절차도 없이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결정하면 주민들은 따라올 것이라는 식의 구시대적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변은진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